

---

#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 디지털 경제 전환을 정보보호산업 성장의 기회로 -

[2021 ~ 2025]

---

2020. 6.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b>I. 추진배경</b> .....	<b>3</b>
<b>II. 비전 및 목표</b> .....	<b>13</b>
<b>III. 중점 추진 과제</b> .....	<b>14</b>
<b>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b> .....	<b>14</b>
1-1. 비대면 서비스 관련 보안시장 활성화 .....	14
1-2.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17
1-3. AI 기반 물리보안 산업 육성 .....	20
1-4. 5G+ ICT 융합보안 산업 저변확대 .....	25
<b>2. 민간 주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b> .....	<b>30</b>
2-1. 공공 및 민간 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 .....	30
2-2. 정보보호기업 성장 지원 .....	33
2-3. 정보보호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강화 .....	38
<b>3. 지속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b> .....	<b>42</b>
3-1. 차세대 보안 新기술 확보 .....	42
3-2. 정보보호산업 규제 및 법·제도 개선 .....	47
3-3.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51

# I. 추진배경

##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제조업 기반의 전통산업이 ICT와 만나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를 통합하여 빅블러(Big Blur) 현상\*이 확대되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

\* AI·빅데이터·클라우드·IoT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나타나는 현상

- 'Data·Network·AI' 기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 지고, ICT와 융합된 산업·서비스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호산업도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필요

※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약 16조 9천억원('19년)으로 최근 3년간 8.4% 성장하였고, '19년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함께 이용자에 대한 사이버 위협도 증가\*하여 보안을 기본으로 한 언택트(Untact) 신산업 출현

\* 화상회의 솔루션 '줌' 보안 문제 대두,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원격근무업체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 기업 일주일만에 6배(200개→1200개) 증가, 화상회의 이용 건수 819% 증가('20.3월)

< 언택트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모델(예시) >

원격근무	비대면 거래	원격교육
		
화상회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	간편 송금·결제 (카카오톡 연동)	EBS 콘텐츠로 강의 구성 (학습관리시스템)

☞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 패러다임 변화는 정보보호산업을 재조명하는 위기이자 기회**

## ◇ 민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강화

- 세계 각국 정부의 기존 PC·네트워크 중심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로는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생활 및 사회 전반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디지털안전 위협 대응에 한계 발생
  - 사이버 공격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사전 예방보다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확보가 중요
    - \* 사이버 공격에 의한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애 또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태로 신속하게 돌아가려는 역량
    - ※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피해: (15)3조\$ → (21)6조\$(20 Cybersecurity Ventures)
-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정보보호 투자 확대, 신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규제 혁신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강화 필요
  - 해외도 민·관이 협력하여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
    - ※ 영국정부는 디지털 보안 내재화 계획으로 구글, MS와 약 1.9억 파운드(2,904억원)를 공동투자, 향후 5년간 사이버보안 솔루션 개발을 민·관이 함께 진행(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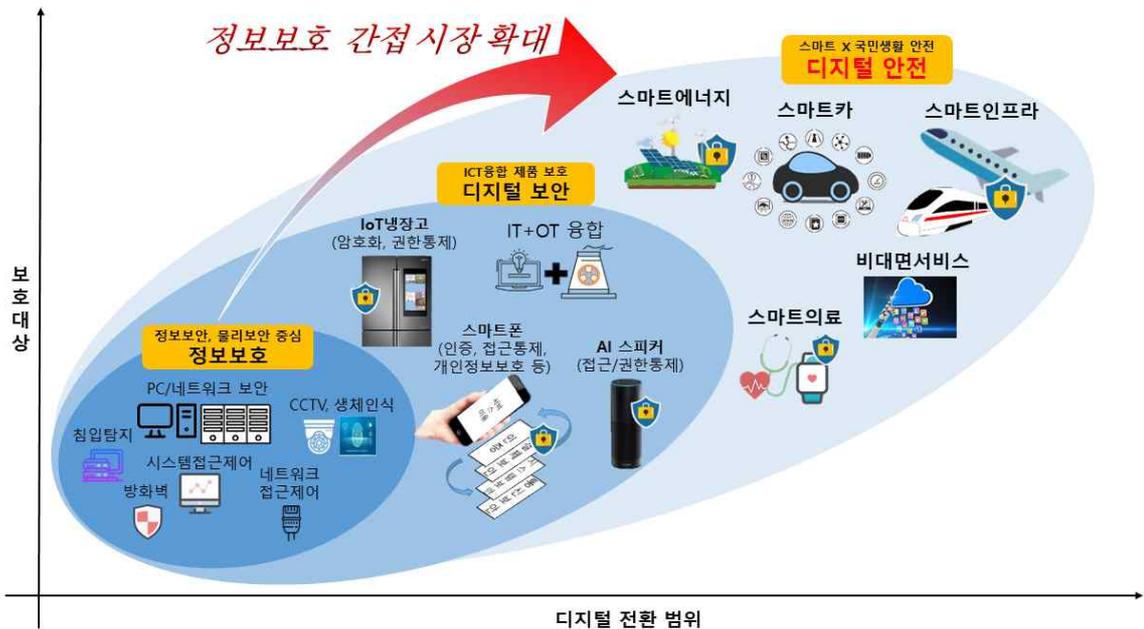
## 👉 디지털 안전 위협에 대한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

- ◆ 범정부 차원의 법정계획인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25년)」을 수립·시행하여,
  - '디지털 전환(D·N·A) + 포스트 코로나'에 필수적인 민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

# 1

## 정보보호산업 시장 환경변화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물리보안\*\*)시장은 '19년 약 10.5조원 규모, 이중 국내 정보보안시장(3.3조원)은 해외(1,212억불)의 2.5% 수준
  - \* (정보보안)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정보유출방지, 암호/인증, 보안관제, 컨설팅 등
  - \*\* (물리보안) 카메라, 저장장치, 바이오인식, 알람/모니터링 및 출동보안 등
- 정보보호는 보안제품·서비스 중심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ICT와 융합된 산업·서비스 내재화로 시장 구분 및 경계가 무의미



기존 정보보호시장	향후 정보보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안) PC·네트워크 중심 보안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보안제품·서비스</li> <li>▲ (물리보안) 범죄·재해감시, 시설보호를 위한 CCTV, 생체인식, 출입통제 등 설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전, 모바일기기, 산업기계 등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에 따른 디지털 보안 중요</li> <li>▲ '산업+ICT+안전' 융합으로 정보보호가 내재화된 간접시장 성장 전망</li> </ul>

- 세계 주요국들은 3~4년 전부터 디지털 경제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 19를 계기로 그 흐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
  - ※ '18년 세계 디지털경제 규모 12조 9천억달러(세계인터넷발전보고 2018)
- 기존 정보보호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넓어지는 정보보호 간접시장\* 공략을 위한 정책 필요

\*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8~15%로 전망**

연도	디지털전환 시장	정보보호 시장	비율
'18년	2,900억\$	401억\$	13.8%
'23년	6,650억\$	1,000억\$	15.0%

(Markets&markets, '19.3월)

□ 국내 및 해외 보안기업들도 ICT, 통신, 제조업 등 비보안기업들과 인수합병(M&A) · 기술협력 · 투자 등을 통해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

< 국내 · 외 보안기업 변화 >



다양한 형태로 융합하며 보안간접시장 확대



## 참고1 주요국 정보보호산업 관련 정책 요지

구분	주요 내용
<b>미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5G 망 구축을 위한 사이버보안 프로젝트에 <b>산업계의 지원을</b> 요청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의 <b>민관 협력을 주도</b></li> <li>☞ 제품 및 기술 지원으로 상용 및 오픈소스 제품을 통합하여 실질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하여 <b>현실적인 사이버보안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을 발전을 도모</b>(5G Cybersecurity: Preparing a Secure Evolution to 5G, '20.5)</li> </ul>
<b>영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비즈니스 전반이 <b>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지침</b>을 발표하고 <b>보안에 대한 새로운 개념 및 담당기관 선정</b></li> <li>☞ 기존 공급자 중심의 사이버보안에서 <b>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안전</b>(Safety Technology) <b>개념을 정의</b>, 산업 협회를 수립하여 새로운 산업을 지원 (Safer technology, safer users: The UK as a world-leader in Safety Tech, '20.5)</li> </ul>
<b>E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 내 <b>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향상</b>의 관점의 법 개정 실시</li> <li>☞ <b>ENISA의 기능을 강화하여</b> 연합 내 사이버보안을 담당토록하고, 연합 차원의 <b>사이버보안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고수준의 신뢰 구현</b> 도모 (사이버보안법, '19.3)</li> </ul>
<b>일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이버보안을 경제사회의 활력 제고 요소로 인식, 지속발전</b> 도모</li> <li>☞ 사이버보안에 대한 <b>경영진의 의식 개혁, 투자 촉진</b>, 다양한 연결로 가치를 창출하는 <b>안전한 공급망 실현</b> 등 '20년 도쿄 올림픽 대응 태세 강화 (사이버보안'19, '19.5)</li> </ul>
<b>중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외 11개 부처 합동으로 <b>주요기반시설 내 ICT 제품 및 서비스 조달시 보안 심사를 의무화</b>(网络安全审查办法, '20.4)하고, <b>위반 시 제품 사용중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등 높은 수준의 규제 마련</b></li> <li>☞ 사이버보안 업계를 대상으로 <b>사이버보안 산업 기금</b>(귀커자허, 중국인터넷투자기금)을 통해 용자를 제공하고, <b>사이버보안 산업 단지</b>(우한, 베이징, 톈진, 텐커)를 <b>조성하여 산업 발전을 지원</b> (중국 사이버보안산업백서中国网络安全产业白皮书, '18.9)</li> </ul>
<b>캐나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정부 및 민간기업,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업을 강조</b></li> <li>☞ ▲ 시스템 보안 및 복원력 ▲ 혁신성 및 적응력 있는 <b>사이버 생태계</b> ▲ 효과적 리더쉽·거버넌스·협업을 3대 목표로 설정, <b>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략적 정책 역량 제고</b>(사이버보안 실행계획 '19~'24, '19.8)</li> </ul>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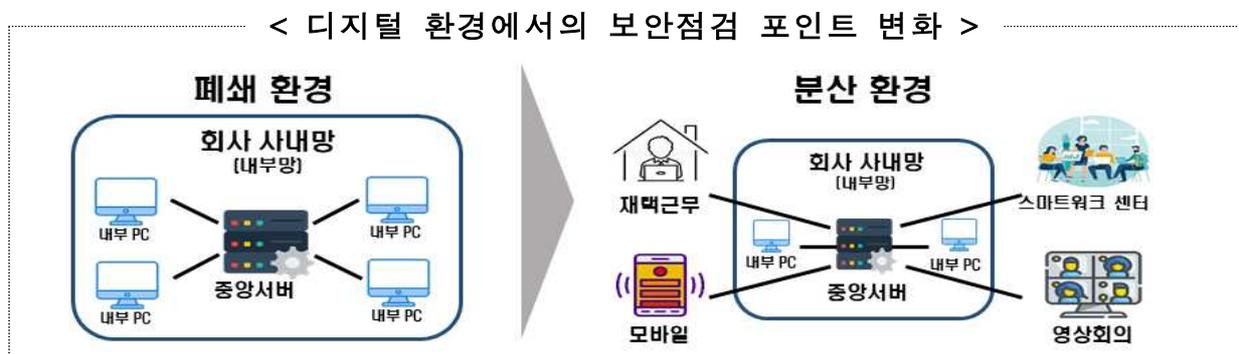
## 우리의 상황

- 제1차 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난 5년간 정보보호산업의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질적 성장과 체질개선 필요
- 그 간의 노력으로 '19년말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10.5조 돌파('16년 9조, 16% ↑), 정보보호 기업은 230개 증가('16년 864개→1,094개, 26.6% ↑)



-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은 보안점검 포인트를 증가시켜 기존과는 다른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보안을 요구
  -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격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특성 상 사용자 인증, 네트워크·접속단말 보안 등 보안점검 포인트가 증가
  - ※ 전문가가 내부망을 집중 관리하던 방식 대신 사용자 전반의 보안이 중요

☞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악성 URL 클릭 횟수 전월대비 260% 증가, 스팸 위협 220배 증가(트렌드마이크로, '20.4월)

□ 영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역량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보안이 현저히 취약\*한 정보보호 양극화 심화

\*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공격 지속 발생('14년 2,291건 → '19년 3,638건), 침해사고로 인한 기술유출 사건의 91%가 중소기업('18년 사이버공격 통계, 경찰청)

○ 보안문제에 대해 자체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안서비스·플랫폼이 도입 될 수 있도록 초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통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유도

☞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 유도를 통해,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복원력 확대·강화 기대

□ 글로벌 기업들은 보안 토털솔루션 공급과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기술력과 규모를 키우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단품 위주 보안 제품 공급과 더불어 영세한 규모\*로 시장 확대에 한계

\*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70.1%가 자본금 10억 미만의 중소 규모로, 중견 보안기업(3년 평균 1,500억원 이상 매출)은 5개사에 불과

☞ 정보보호기업 간 기술 제휴 및 클라우드·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기업(87%)과 개인(95%)이 모두 높은 수준이나,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한 정보보호 투자는 민간\*·공공\*\* 모두 미흡

\* 정보보호 예산 편성 기업은 32.3%, 정보보호 예산이 IT예산의 5% 이상인 기업은 2.9%에 불과('19년 정보보호실태조사)

\*\*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 비율 : 한국 8.4%, 미국 19.9%

☞ 디지털 경제에서 정보보호는 옵션이 아닌 필수 인프라로 인식,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방역망 구축, 공공분야 대규모 사업에 대한 보안내재화로 정보보호 투자를 연결

□ 사이버 위협이 국민 안전과 디지털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는 기술, 인력이 부족한 실정

○ (기술력) AI 등 차세대 보안의 핵심 기술은 소수 글로벌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국내보안 기업의 경쟁력은 미약

※ 국내 AI 기술수준(81.6%)은 성장하고 있으나 미국 중심의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미국(100%) 대비 AI 기술수준('18년) : 유럽(90.1%), 중국(88.1%), 일본(86.4%) <IITP, '19>

-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 이용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기술 격차\*는 여전, 단기간 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 미국(100%) 대비 기술수준('18년) : 유럽(94.4%), 일본(90.4%), 한국(89.7%), 중국(88.9%)<IIT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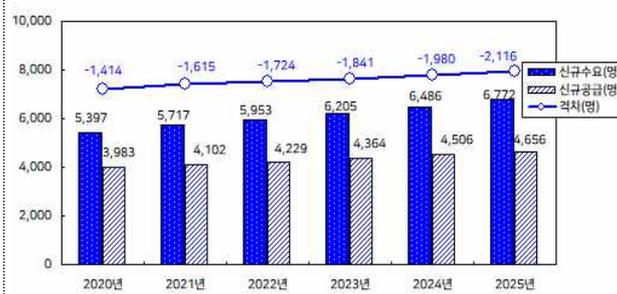
☞ 은밀화·고도화·지능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보안기술 선점 및 기초·원천기술 개발 필요

○ (인력) ICT융합 확산,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기술 필요성 증가로 인력수급차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속 부족

- '사고 대응' 중심의 인력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고 산업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요구

☞ 정보보호 인력양성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잠재인력 및 산업 리더형 우수인재 양성 적극 추진 필요

<국내 정보보호 인력 수급 전망('20~'25)>



<글로벌 정보보호 전문인력 수급 격차>



출처 : '19 정보보호 인력현황 보고서(과기정통부), Cybersecurity workforce study 2019, (ISC)<sup>2</sup>

## 참고2 그 간의 주요성과

### □ (매출)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 16.2% 증가('16~'19)

<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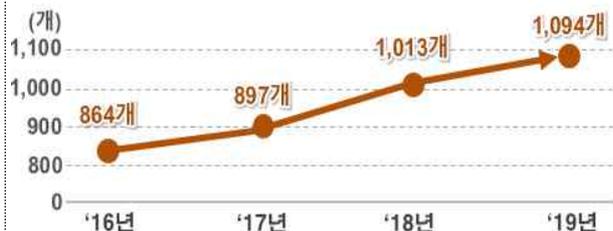
- '19년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 10,5조원 (전년 10.1조원 대비 4.3%↑)

- 정보보안(3.3조), 물리보안(7.2조)

⇒ 국내 산업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

### □ (규모) 국내 정보보호기업 수 26.6% 증가('16~'19)

< 국내 정보보호 기업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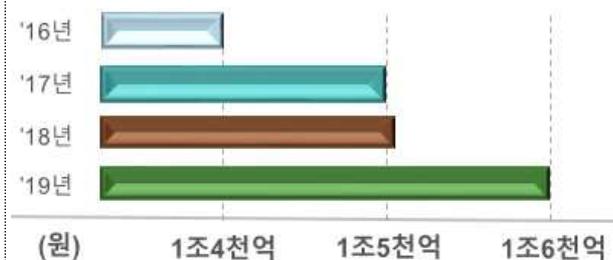
- '19년 전체 정보보호기업 1,094개

- 벤처기업 441개, 일반기업 653개

⇒ 정보보호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지원을 통해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300억 이상 기업은 37개에 불과

### □ (수출) 국내 정보보호기업 수출액 14.3% 증가('16~'19)

< 국내 정보보호산업 수출액 >



- '19년 정보보호 수출액 1.6조원

- 정보보안(1천억), 물리보안(1.5조)

⇒ 제1차 진흥계획 수출 목표('20년 4.5조) 대비 부족한 성과를 만회하기 위한 보완책 필요

### □ (인력) 국내 각 분야의 정보보호인력 11,451명 증가('16~'19)

< 국내 정보보호 인력 >



- '19년 정보보호 인력 135,194명

- 공공분야 4,380명, 일반 84,539명, 보안기업 46,275명

⇒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급 미스매치 발생

- 향후 5년은 D·N·A 기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정보보호가 기본이 되는 신뢰 기반의 안전한 디지털 경제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
  -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기업 성장과 민간의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해서 정보보호산업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전략 필요

#### < 주요 육성 전략 >

##### 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 비대면 서비스 관련 보안시장 육성, AI 보안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국민안전 및 ICT 기술융합에 따른 신규보안 시장 선점

##### ②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민간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제품·서비스 공급

##### ③ 지속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 차세대 핵심 보안기술 확보, 정보보호 규제와 법·제도 개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마련

◆ **쏠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사회 도래, D·N·A 기술 확산**  
 → **신뢰(Trust) 기반의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산업진흥계획 수립**

## II. 비전 및 목표

비전	<b>정보보호가 기본이 되는 신뢰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b>																	
목표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lt;2019년&gt;</td> <td>&lt;2025년&gt;</td> <td></td> </tr> <tr> <td><b>전체매출액</b></td> <td><b>10.5조원</b></td> <td><b>→ 20조원</b></td> <td>(9.5조원, 연평균 11.3%↑)</td> </tr> <tr> <td><b>300억이상 기업</b></td> <td><b>37개</b></td> <td><b>→ 100개</b></td> <td>(63개, 연평균 18%↑)</td> </tr> <tr> <td><b>일자리</b></td> <td><b>13.5만명</b></td> <td><b>→ 16.5만명</b></td> <td>(3만명, 매년 6천명↑)</td> </tr> </table>		<2019년>	<2025년>		<b>전체매출액</b>	<b>10.5조원</b>	<b>→ 20조원</b>	(9.5조원, 연평균 11.3%↑)	<b>300억이상 기업</b>	<b>37개</b>	<b>→ 100개</b>	(63개, 연평균 18%↑)	<b>일자리</b>	<b>13.5만명</b>	<b>→ 16.5만명</b>	(3만명, 매년 6천명↑)
	<2019년>	<2025년>																
<b>전체매출액</b>	<b>10.5조원</b>	<b>→ 20조원</b>	(9.5조원, 연평균 11.3%↑)															
<b>300억이상 기업</b>	<b>37개</b>	<b>→ 100개</b>	(63개, 연평균 18%↑)															
<b>일자리</b>	<b>13.5만명</b>	<b>→ 16.5만명</b>	(3만명, 매년 6천명↑)															
중점 추진 과제	<b>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대면 서비스 관련 보안시장 활성화</li> <li>②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li> <li>③ AI기반 물리보안 산업 육성</li> <li>④ 5G+ ICT 융합보안 산업 저변확대</li> </ul>																
	<b>민간 주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공공·민간 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li> <li>⑥ 중소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li> <li>⑦ 정보보호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강화</li> </ul>																
	<b>지속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⑧ 차세대 보안 新기술 확보</li> <li>⑨ 정보보호산업 규제 및 법·제도 개선</li> <li>⑩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li> </ul>																

### Ⅲ. 중점 추진과제

##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 1-1 비대면 서비스 관련 보안시장 활성화

#### 비대면 서비스 관련 보안 新시장 창출 및 안전성 확보



< 국내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매출액 목표치 >

####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사회 전반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언택트(Untact) 환경으로 전환
  - ※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온라인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급부상
- 세계 클라우드 보안 시장은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글로벌 기업의 선점으로, 후발 주자인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애로
  -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기술 격차 : 미국 대비 88.5%(약 1.1년)
- 국내 클라우드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우선 주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확산을 통한 시장 활성화 필요

#### □ 추진 전략

- 안전한 비대면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및 공공 선도
- 비대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수요기업 지원으로 이용 활성화
- 비대면 솔루션, 보안 공급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 □ 추진과제

### ◇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및 공공분야 선도적 도입

- (보안내재화 시범사업)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시범 적용
  - \* 무인점포의 경우 현장에 생체인식, 출동보안 등 기술을 적용해서 사업종료 후에도 실 서비스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 비대면 서비스별 보안기능 예시 >

구분	원격교육	원격근무	상거래
특징	학생·교사 등이 쉽게 적용 가능	언제·어디서나 동일한 보안수준	편리한 인증기술
보안기능	도탈보안 솔루션 (한번 설치로 간편 이용)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무인점포(생체인식+결제+출동보안 등)

- 보안 민감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 시 보안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과 보안성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문서유출 방지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콜센터 재택·원격근무시스템 등

- (신속 보안인증) 공공분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클라우드 우선 도입을 위해 보안인증 신속처리\* 지원 및 인증범위 확대('21~)

\*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필요한 소요기간 단축(3.3개월 → 2.5개월)

- 국가·공공기관에 개방형 OS 기반의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보안인증 기준 마련

\* (Desktop as a Service) 개별 PC마다 윈도 등의 OS를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대신, 접속단말을 통해 원격으로 작업 환경을 이용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 (공공수요 창출) 보안성을 확보한 IoT 제품(IP카메라, 공유기 등)이 도입되도록 컨설팅·인증 등 지원\*하여 보안강화 제품의 보급 확대

\*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성능 인증(TTA), IoT 보안인증(KISA) 등

## ◇ (수요 확대)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보안 도입 확산 지원

- 보안 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도 쉽고 안전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비용 지원
  - 정보보호에 관심과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추가도입 등 투자 지원

### <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지원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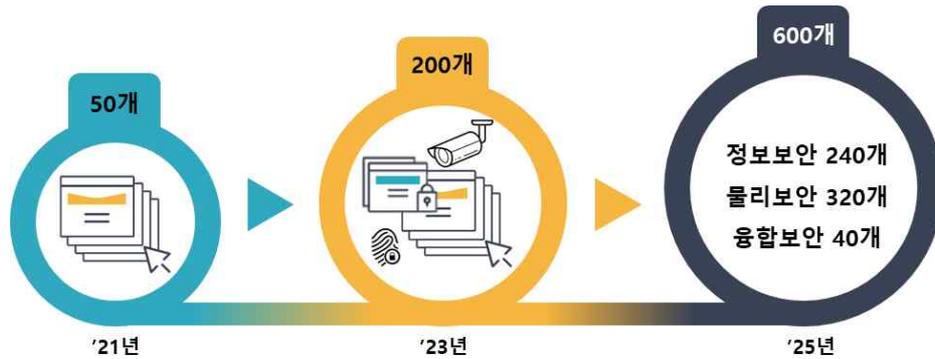
구분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관심·투자기업
대상 기업	351만개(PC 보유기업) → <b>9,000개 선정</b>	31만개(정보화 전담부서 보유) → <b>1,000개 선정</b>
지원 내용	보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제공 원격 보안점검, 백신 및 웹·이메일 보안 등 필수 서비스 위주	종합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보안 고도화 지원 APT*, UTM** 장비 등 보안제품 또는 데이터 변조방지 등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 Advanced Persistent Threat(지능형지속공격) \*\* Unified Threat Management(통합위협관리)

## ◇ (공급 지원) 비대면 솔루션 & 정보보호 공급기업 지원

- (개발&고도화 지원) 정보보호제품의 클라우드 전환을 유도하는 시범사업 추진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보안수준 컨설팅 추진(21~)
  - 유망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전환 및 개발 지원
    - \* ID관리/접근제어, 이메일 보안, 웹방화벽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환 및 개발 지원
  - 보안기업의 비대면 보안서비스 제공 내용·기간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월 사용료 지급)로 전환 유도
  - ※ 정부·공공기관에서 예산계획 수립 및 편성, 집행 시 기존 보안제품 구입 및 유지보수 개념이 아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지급 방식으로 변경 추진
- (보안 점검 지원)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중소 SW개발업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성 진단(21~)
  - \* 재택·원격근무 및 교육솔루션(156개 개발사 184개 솔루션, 한국SW산업협회)

##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기반 보안기술 확산



<정보보호 학습데이터 활용 기업 목표치>

## □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IT기업들은 정보보호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AI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보안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진행
  - ※ (구글) AI를 활용해 일 1억개 이상의 스팸메일을 추가로 차단, (IBM) 사이버범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보안위협 지능형 플랫폼 개발, (아마존) 머신러닝으로 자사 클라우드 계정을 완전히 보호하는 기술 개발
- 반면, 국내 AI 기술 수준은 미국대비 78% 수준으로 미흡하고, 해킹·비정상 데이터 학습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도 부족
  - ※ 국내 데이터 시장은 수요, 공급이 모두 부족한 상황으로 거래량이 미국의 1/400 수준이며, 데이터 기술력은 미국(100)대비 79%, AI 기술력은 78% 수준으로 평가
- 데이터3법 개정으로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AI보안 기술·학습데이터 지원 필요

## □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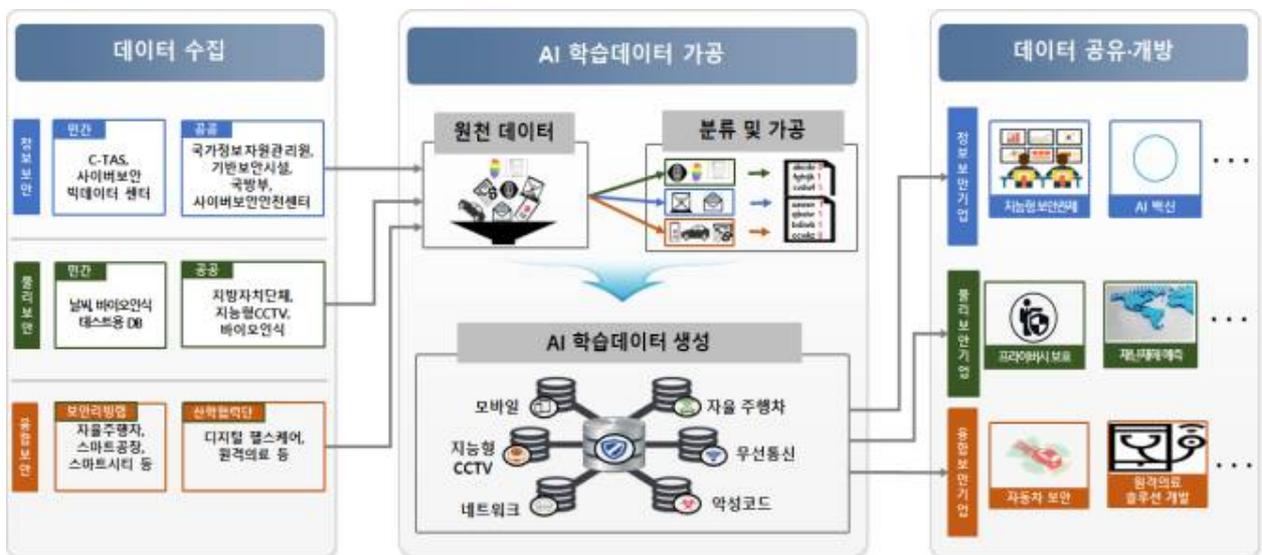
- 정보보호 관련 원천데이터를 AI보안 학습용으로 가공·지원하여 '정보보호+AI'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 ※ AI·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
- AI 기반 보안제품 신규개발, 기존 제품의 AI 적용 및 테스트베드 환경 지원 등 AI를 적용한 보안제품 개발 활성화 유도

□ 추진과제

◇ AI 기반 보안제품 확산을 위한 학습데이터 가공·공유 체계 구축

- 정보보호기업을 비롯한 산·학·연의 AI 기반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학습데이터 가공·공유 체계 구축('21~)
  - 여러 곳에 분산되어 제공 중인 정보보호 원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가공, AI 학습데이터 공유를 위한 이용 기반 강화

< AI보안 학습데이터 가공·공유 체계안 >



- 정보보호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의 규모, 다양성 등을 확대하여 양질의 AI 보안 학습데이터를 단계적 제공

구분	원천데이터 수집 확대
정보보안	KISA(6.9억건) 뿐 아니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반시설 등 공공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가공하여 학습데이터 정확도 제고 ※ 수집처 : (기준) C-TAS,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 → (확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기관
물리보안	업계가 확보하기 어려운 생체인식, 재난·재해 데이터를 가상데이터 생성 기술로 제작하여 학습데이터 규모 및 다양성 확대
융합보안	병원 등 산학협력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의 보안 리빙랩을 통해 OT(제어운영기술) 영역의 취약점 등을 수집·가공하여 학습데이터 확보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AI 보안 학습데이터를 개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

## ◇ 정보보호기업의 AI 학습데이터 이용 지원

- 정보보호기업의 영상, 생체인식 등 데이터 기반 지능형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학습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집중 지원('22~)

※ 데이터 구매, 일반 가공, AI 가공 등을 데이터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 보안산업 데이터 사례 >

구분	주요 내용
물리보안	CCTV 영상, 바이오 이미지(지문, 얼굴, 홍채, 음성 등), 재난 재해 환경 영상(홍수, 산불, 산사태, 테러 등) 등
정보보안	악성코드 및 악성앱 데이터, 스팸 데이터, 보안관제 네트워크 데이터 등
융합보안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 융합보안 선도 분야의 보안 관련 데이터

- AI 보안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비식별 처리(기업정보, 피해자 정보 제거 등) 및 비식별 처리기술 개발\* 지원('22~)

\* 데이터, 영상정보 등에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영상합성 등

- AI 보안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AI 보안 테스트 지원\*을 통해 AI 보안 머신 학습의 정확도 개선과 제품 고도화('22~)

\* AI 기반 보안제품 신규개발 또는 기존 제품에 AI 기능 적용을 위해 필요한 샘플 데이터셋 제공 및 AI 보안 성능개선 컨설팅

- 정보보호 AI 제품 신규개발 또는 기존 제품에 AI 기능 적용을 위해 필요한 샘플 데이터셋 제공 및 AI 보안 성능개선 컨설팅

- AI보안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학·연 전문가가 기술개발·성능을 경쟁하는 AI 보안 기술개발 챌린지 대회 개최('22~)

- 개방형 문제해결 플랫폼인 (가칭) 한국형 캐글(Kaggle)\*로 단계적인 확대 개편을 통해 데이터 이용역량 강화 및 제품 개발 촉진

\* 기업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데이터와 상금을 걸면,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찾는 방식

※ AWS,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캐글을 통해 총 상금 100만달러 상당의 '딥페이크 식별 알고리즘 개발 챌린지'를 개최하여 13개국 1,000개 이상의 팀이 참여('20.1)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물리보안 산업 육성 및 응용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급증하는 범죄, 테러, 재난·재해 수요 증가 및 물리보안 의무화 인식 제고에 따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글로벌 물리보안 시장 규모는 840억 달러('18) → 1,190억 달러('23)로 연평균 7.3% 지속성장 예측(Markets and Markets, '19.1월)
- 국내 물리보안 시장 규모는 7조원('18)→7.2조원('19)으로 연 3.5% 저성장 추세이며, 외국기업의 저가 공세로 성장 둔화
  - ※ 글로벌 CCTV 시장에서 중국 기업은 1, 2위를 차지하며 연평균 20%대 성장
- 국내 물리보안 기술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게 평가(91.8%)되어,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흥시장 개척 필요
  - ※ 기술수준: 미국(100%) > 유럽(96.9%) > 일본(94.4%) > 중국(92.0%) > 한국(91.8%)

## □ 추진 전략

- 물리보안 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 기술 개발 및 산업 기반 강화
-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경쟁력을 갖춘 물리보안 제품·서비스 활용

□ 추진과제

◇ 물리보안 선도적 기술 개발



○ ICT 환경 고도화에 따라 지능형 CCTV의 무선화·이동성 등 활용성을 높이고, 생체인식의 원거리 등 정밀식별 가능한 선도 기술 개발('22~)

\* 기술개발 결과를 물리보안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 (Edge 기술) 드론·차량 등 5G 모빌리티 연계 환경에서 Edge 기반 (단말)으로 실시간 객체식별 및 이상행위 분석·전송 기술 개발
  - ※ (객체) 사람, 동물, 식물, 사물 등 / (이상행위) 테러, 화재, 산불, 쓰러짐, 침입 등
- (이기종 센서간 객체인식 기술) 야간(저조도), 원거리 등 악조건 환경의 이기종(열화성, 가시광) 센서간 지능형 객체 인식기술 개발
  - ※ 열화상 기능으로 형태, 행동 탐지→가시광선으로 객체 정밀 인식(얼굴, 차량번호판 등)

< 열화상 + 가시광선 분석기술 활용 >



- (다중카메라 객체 추적 기술) 다수의 이기종 CCTV 영상(드론, 고정형 CCTV)간 사람, 사물 등 이동객체 식별·추적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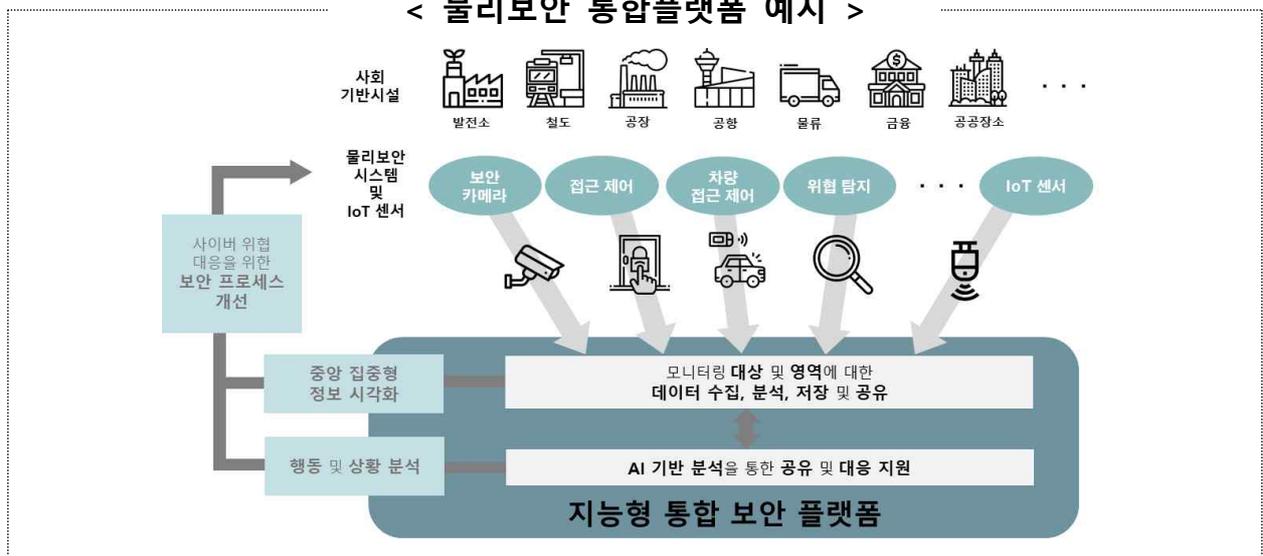
< 다중 영상 카메라간 이동객체 추적 개념도 >



※ 객체 식별(옷색상, 얼굴 등)을 통한 CCTV, 드론 등과 연계로 이동 현황 파악 및 추적 가능

- (통합플랫폼 개발 및 확산) CCTV 영상, 생체인식 정보, IoT 센서 정보를 클라우드, AI 기술 기반으로 통합 분석하여 이상상황 관제, 경비출동 등을 제공하는 “물리보안 통합 플랫폼” 개발 및 확산(22~)
  - AI, 클라우드 기반으로 표준 및 상호연동 데이터 통합·분석·대응조치 등 물리보안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개발\* 및 보급\*\*
    - \* 데이터 표준화(전송프로토콜, 포맷 등), 이기종 제품간(예: 지능형 CCTV↔화재감지 센서, 생체인식↔출입통제 기기 등) 상호연동 및 관리 기능 구축
    - \*\* 스마트 시티,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 실증
  - 건물·시설, 스마트팩토리, 농·어촌, 무인점포 등의 원격 안전관리, 마케팅 등의 신규 영역으로 통합 플랫폼 확산

<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예시 >



## ◇ 물리보안 산업 기반 강화

- (인증 확대) 5G 기반 이동성 보장, 비접촉 인식기술 등 시장요구에 맞춰 성능인증 대상 확대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확산 지원('21~)
  - (CCTV 인증) 5G 기반 지능형 CCTV 장비로 성능인증 대상 확대
    - ※ 모바일 CCTV, 엣지 CCTV, 열화상 기반 CCTV, 다중 카메라 이동 객체 추적 기술 등에 대한 성능인증 추진
  - (생체인식 인증) 신체·행동적 특성\*에 따른 비접촉 방식 성능인증
    - \* (신체적 특성) 지문, 얼굴 등 / (행동적 특성) 음성, 걸음걸이 등
    -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문, 홍채인식 등 접촉 방식보다 비접촉 인식 기술을 요구
- (실증단지 구축) 물리보안을 실제처럼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 구축('22~)
  - 지자체 등 공모를 통해 실증단지를 선정하고, 공공, 소매, 가정, 교통, 금융 등의 분야별 물리보안 혁신기술 제품·서비스\* 도입·시험
    - \* 다중 CCTV 객체 추적, 드론 이상행위 탐지, 열화상 객체 탐지, 비대면 무인점포 운영 등

< 실증단지에서 물리보안 제품·서비스 운영 예시 >



- (경진대회 개최) 물리보안 관련 기술개발, 품질제고, 신규 아이디어 공모 및 기술사업화 등을 위한 물리보안 경진대회 개최('22~)

## ◇ 물리보안 응용 서비스 확산

- (응용 서비스 확대) AI, 클라우드 통합플랫폼 기반의 보안서비스\*를 공공, 소매, 가정, 금융, 건물관리 등 영역별 응용 확대('22~)
  - \* CCTV영상, 생체인식 정보, IoT 센서 정보 등을 클라우드, AI 기술 기반으로 통합 분석하여 이상상황 관제, 경비 출동 핀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생체인식 활용) 생체인식 신기술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생체인증이 추가된 Multi-Factor 스마트통장, 스마트카드 시범사업 추진
  - ※ 기존 PIN 번호에 지문, 정맥 등 생체인식 정보가 추가된 스마트통장 및 스마트카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 기업이 제품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결과 공유
- (CCTV 사업화 지원) 학교폭력, 미아찾기, 돌봄 서비스(아동, 노인) 등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 지능형 CCTV 사업화 지원 확대
  - ※ 실시간 위급상황을 응급 의료·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
- (무인서비스 기술고도화) 유통, 금융분야 무인화 서비스 확산을 위해 범죄 예방, 안전 보장을 위한 물리보안 서비스 결합('22~)
  - 무인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취약성 분석 및 보호 기술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서비스 개발을 지원
  - ※ 예) Just Walkout형 생체인식 스피드(아마존GO), 동선 추적형 머신비전 솔루션(알리바바 티몰)

### <무인화 서비스 모니터링 보안 - 미래형 무인점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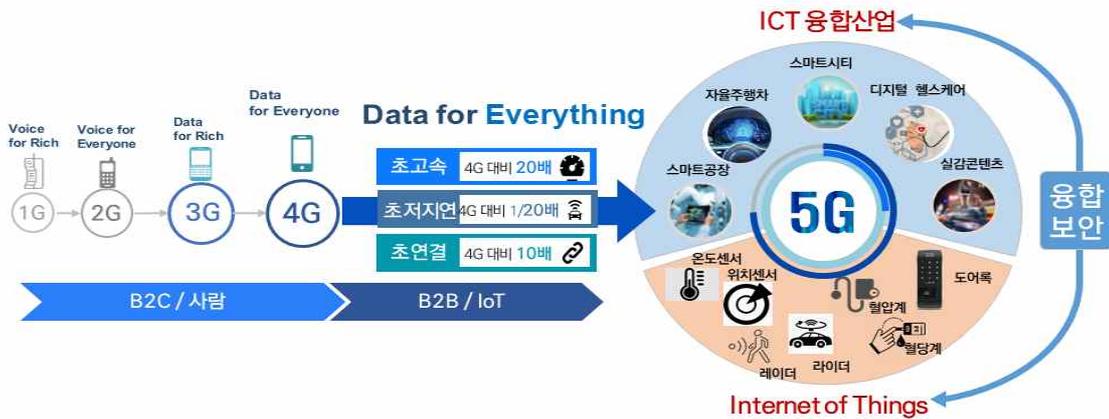
ICT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신규 보안서비스 시장 선점



□ 현황 및 문제점

- ICT 융합산업 확산에 따른 ICT와 제조·운영기기의 결합으로 기존 사이버보안 위협이 다양한 전 산업의 안전 위협으로 전이
- 5G 상용화로 ICT융합 서비스·기기가 확산됨에 따라 해킹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안전 및 경제전반에 직접적 피해 초래
- ※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융합서비스 분야별 세계 시장 확산 및 산업 중요도는 날로 증가

【 5G 상용화로 사물인터넷(IoT)·ICT 융합산업 가속화 】



□ 추진 전략

- ICT 융합산업 보안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한 보안 안정성 확보
- 산업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ICT 융합산업 보안시장 창출
-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 추진과제

### ◇ ICT 융합산업 보안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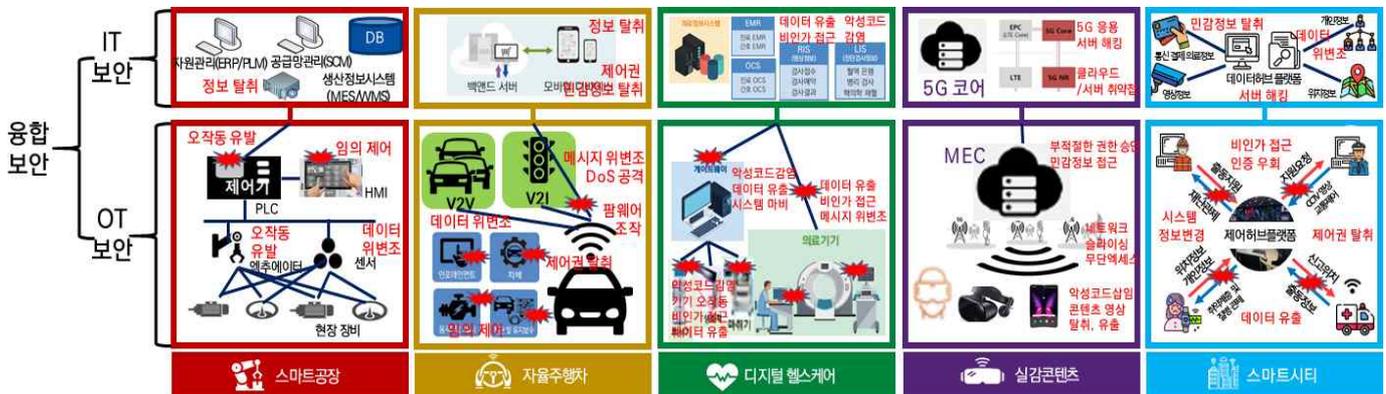
- 5G 상용화로 초연결이 가속화되는 ICT 융합환경에서 보안위협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5G 융합서비스 환경조성('21~)

1차 산업진흥계획('16~'20)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융합산업별 <b>보안가이드(7종)</b> 발간·배포 및 IoT 인증제도 시행</li> <li>• IoT기기, ICT 융합제품에 대해 공개된 보안위협 조치를 하는 대응 위주의 초기 기반 조성</li> </ul>

⇒

2차 산업진흥계획('21~)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융합산업 <b>현장 실증</b>을 통한 보안모델 구축·확산 및 제도개선 병행</li> <li>• <b>IT이용기업, 이용자</b>로 확대하여 ICT 융합 산업 분야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대응·복구까지 <b>종합대응체계</b>로 전환</li> </ul>

#### < 융합보안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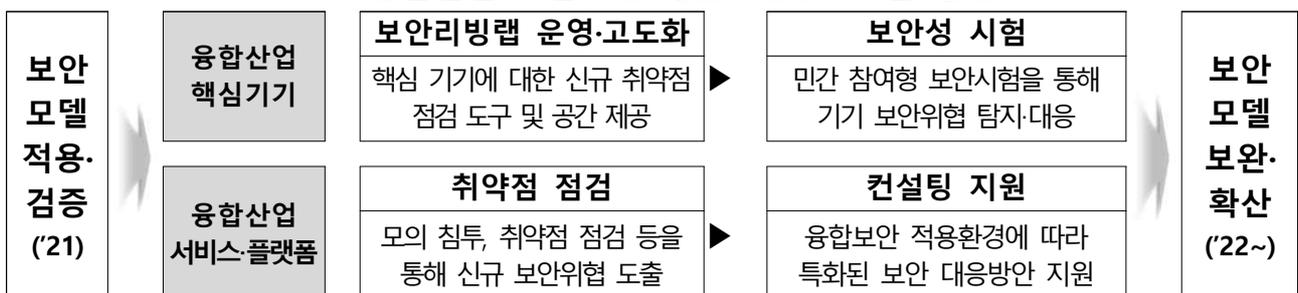


- (보안모델 개발·실증) ICT 융합산업\* 서비스별 보안위협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분야별 보안모델 개발(융합산업분야 확대, '21~)

\* '5G+ 전략(관계부처 합동 19.4월)'에서 선정한 5대 핵심서비스 분야(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실감콘텐츠)를 대상으로 추진

- 보안모델의 현장 적용('21)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수 적용사례를 발굴하여 산업계로 확산('22년~)

#### < ICT 융합산업 보안모델 개발·실증·확산 방향 >



- 기존 IT환경과 다른 융합서비스 기기·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검증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융합산업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융합산업 현장에 운영하고 핵심기기 보안성 시험 도구와 절차를 제공(보안리빙랩)

< 보안리빙랩 구축(예) >



- (협력체계 구축) 5G+ 핵심서비스별 소관부처, 유관기관·단체 및 민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1~)

- 부처별 협력을 통한 핵심 서비스별 보안강화 및 제도화\* 지원

\* 개별법에 따른 시험·인증에 보안기준 반영을 위한 연구·실증사업 수행 시 지원

- 분야 간 협력을 통한 융합보안 확산 및 시장·기술정보 공유

< 민관합동 융합보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예) >

융합보안 민관포럼(안)						
협의체	5G-SFA 제조혁신유관기관 협의체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협의회 5G-V2X 범정부 연구반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스마트시티 정보보호 민·관 합동 TF	의료 ISAC 운영 협의회 AI기반 응급의료 협의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실감콘텐츠 활성화 협의체 실감형 콘텐츠 진흥위원회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주무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유관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고려대 전남대 KAIST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세의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	공공서비스
융합서비스 위협정보 분석·공유(CS-TAS) 체계						

## ◇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융합서비스·제품의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사고 예방·대응, 협력기반 조성, 보안강화를 위해 개별법령의 제도 정비 추진

※ 5G, IoT 전반의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20.6월)

- 산업분야별 보안 내재화를 위해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시행

### < 주요 제도 정비 추진과제 >

산업분야	추진과제	소관부처(기관)
홈네트워크	건설 설계기준(시방서)에 보안 기준 추가	과기정통부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운영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자율주행차	자율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기술권고안) 개발 및 보안규정 제도화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검증 방안 마련	식약처
드론	드론 기기 보안 인증제 도입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 ◇ 융합보안 산업 신시장 창출

- (융합보안 B2B 네트워킹) 융합보안 수요기업·기관과 보안업계간 정보교환, 수요 창출을 위한 '융합보안 Tech-Day' 개최('21~)

※ 융합산업계의 낮은 보안인식, 융합산업 보안 전문가 부재, 정부부처 소관 등의 이슈 해결을 위해 기업·기관 보안기술 현황 조사 및 매칭지원

- (보안강화 지원)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보안기술 적용\*, 융합산업 보안 컨설팅 바우처 지원 검토

\* 융합보안 기업의 레퍼런스 확보,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버스(세종), 스마트 시티(부산), 디지털헬스케어(강원) 등 공공분야 적용 지원

- (융합보안 버그바운티) 안전한 융합보안 제품의 확산과 보안성 강화를 위한 융합보안 취약점 찾기 대회 운영('21~)

- 민간 보안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융합보안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안전성 제고 및 관심 유도

## ◇ ICT 융합보안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 IoT 보안인증 제도에 대한 의무화 등 국제시장 변화(美 캘리포니아법 (SB-327) 등)에 따라 글로벌을 선도하는 인증체제로 개선('21~)
  - 융합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산업분야(의료, 스마트홈, 드론 등) 별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산업 분야별 지원 확대
  - IoT 보안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동향, 인증제도를 분석하여 인증 제품 공공분야 우선 도입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여 논의사항 반영
- IoT 보안 인증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24~)
  - 국제전기통신연합기구(ITU-T)를 통해 우리 IoT 보안인증 기준 (X.iossec-4)의 국제표준화(~'21) 및 국가 간 상호인정 추진(~'24)
  - ※ (1단계) 국제표준화 → (2단계) 양국간 상호인정 → (3단계) 다국간 상호인정

## ◇ 안전한 ICT 융합보안 솔루션 개발·공급 지원

- (취약점 점검·보완) 영세 ICT 중소기업을 위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도구와 보안 취약점 점검 테스트베드 사용 지원
- (개발환경 점검) 중소 SW 개발·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소스코드 백업시스템, 서버계정 관리 등 개발환경 보안점검 및 컨설팅 지원
- \*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비대면 솔루션 및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용 정보보호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
- (개발보안\* 지원) 설계-구현-테스트 등 단계별 SW 개발에서 지켜야 할 보안기능·안전한 구현 등의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2~)
- \*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개발자 실수, 논리적 오류, 보안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설계, 보안코딩, 보안테스트

## 2. 민간 주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2-1 공공 및 민간 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민간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보안시장은 미국(약 30% 비중)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규모 수요와 보안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등이 주요 투자 동인
  - ※ 美 정부는 보안시장의 약 60% 수준의 예산 집행 중('19, 워싱턴 포스트)
- 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을 선진국 수준(美 19.9%)인 20%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유인할 필요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프라가 열악해 중소기업이 해킹의 주요 대상 혹은 악성코드 유포·경유지로 악용
  - ※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공격 지속 발생('14년 2,291건→'19년 3,638건), 침해사고로 인한 기술유출 사건의 91%가 중소기업('18년 사이버공격 통계, 경찰청)

#### □ 추진 전략

- 공공 정보보호 수요 확보를 위한 국가주요시설의 보안내재화
-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보호 투자 확대 유도

## □ 추진과제

### ◇ 공공부문 정보보호 투자 확대 기반 조성

- (사회) 대규모 국가 투자사업(항만, 도로, 산업단지 등) 프로젝트에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를 통해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촉진('23~)
  -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정보화계획 수립 외에 정보보호계획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 확대 추진
  - ※ (현행법)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은 국가정보화계획 수립·반영 中 →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內 정보보호계획 수립·반영 조항 신설(안) 마련
- (공공분야 5G망 구축) 유선 네트워크 기반의 행정업무 환경을 5G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보안성 실증 추진
  - 5G 기반 정부업무망 이용에 필수적인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정보보호 투자로 연계, '5G장비+단말+보안' 패키지化로 해외 진출을 위한 레퍼런스 제공
- (양자암호통신) 국가 주요 통신망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 통신망을 시범 적용하여 차세대 기술 및 관련 시장을 육성
  - ※ 세계 양자암호통신시장은 '30년까지 26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19년 IQT Report)
  - ※ 미국, 중국은 양자암호통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5대 핵심기술(5G, AI, 양자암호, 반도체, 자율주행차)로 선정하고 적극 투자 중
- (적정대가 산정) 원가분석 데이터 기반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유형별 적정 대가 산정 가이드 개발 추진('21~)
  - H/W 일체형 보안제품, 보안 SW, 정보보안 서비스 등 유형별로 보안성 지속 서비스\* 등의 적정대가 세부 기준 제시
  - \* 정보보호제품은 일반 상용 SW와 달리 신규취약점 대응을 위한 수시 업데이트 필요
  -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시, 정보보호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분리하여 계약 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 민간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사이버 방역망 강화) 전국적 사이버 안전망 구축·운영을 통한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신규 정보보호 투자 수요 도출('22~)
  - 現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여(10→17개소) 중소기업 상시 보안컨설팅 위한 전국 단위 사이버방역망 구축
  - 사이버 방역팀\* 구성 및 경제·사회적 관심 기업\*\* 등 보안 취약 기업군 정보보호 점검 및 집중지원을 통한 신규 수요 도출

\*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대응본부 내 신설 + 민간 보안기업과 협업체계 구성

\*\* 최근 코로나19로 진단키트 개발 등 바이오기업에 대한 관심 급부상

### < 사이버 방역팀 구성 및 역할 >

구성	역 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 보안기업	· (평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 보안사항 상시 점검 * 웹 취약점, 민감정보 보호조치, 비대면서비스 이용 시 보안 등 · (대규모 사고) 사고 대응, 중소기업 복구 지원 등 역할 전환

- (제도 개선) 민간기업 평가 기준 내 정보보호 투자 및 활동을 추가하여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노력 및 투자 확대 유도('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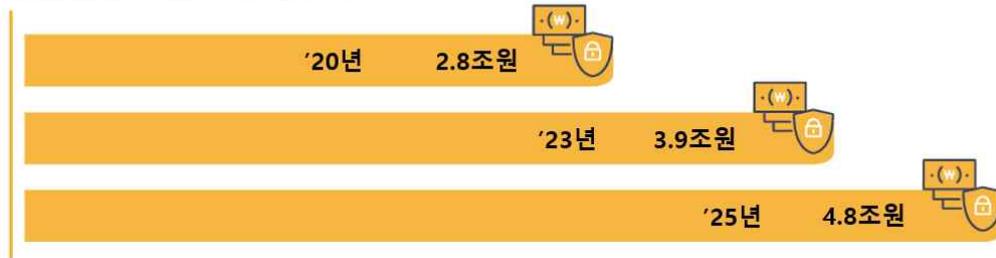
### < 민간기업 평가 기준 내 정보보호 지표 추가 방안 >

	기업신용평가	사업 보고서	정보보호 공시
추진 내용	평가 기준 중 '산업 위험'에 '사이버 환경 변화' 항목 신설	사업보고서 內 정보보호 투자액, 인력 등 기업 '정보보호 투자 현황' 항목 신설	ISMS인증 의무기업 및 CISO 등록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유도

- (지역 보안기업 육성) 지역 우수 보안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지역 정보보호 기술 및 서비스 공급 기반 강화('22~)
  - 지역별 주요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서비스 수요, 참여요건 분석·공유 등 정보보호 서비스 수요와 공급 매칭

## 정보보호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정보보호 중소기업 매출액



##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70.1%가 자본금 10억 미만의 중소기업 규모로, 중견 보안기업(3년 평균 1,500억원 이상 매출)은 5개사에 불과

- 또한 정보보호 상장 기업의 비율도 9.4%에 불과

※ 매년 정보보호 부분 주목해야 할 기업 150社 중 112개社가 미국, 18개社가 이스라엘, 7개社가 영국, 5개社가 캐나다(Cybersecurity Ventures)

- 글로벌 보안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나, 국내 보안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영세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시장 확대 한계

\* 연 12~15% 성장으로 '20~'25년간 누적 1조달러 시장('19 Cybersecurity Ventures)

\*\* 국내 정보보안 매출은 3.3조원, 100인 미만 기업이 80.4%('19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 추진 전략

- 혁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고성장 지원체계 강화
-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으로 지속 성장 환경 조성
- 혁신선도 보안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 추진과제

◇ 정보보호기업 高성장 지원 클러스터 조성

◆ 정보보호 관련 기업, 연구·교육기관, 지원 기관 및 시설 집적을 통해 산·학·연 정보보호 기술, 아이디어 공유와 新기술·제품 개발과 창업 유도



○ (정보보호 산업 고성장 기반 조성) 우수 新기술 보유 정보보호 기업을 위한 시설·사업 등을 송파 클러스터에 집적하여 기업 고속 성장 기반 마련(23~)

< 정보보호 산업 고성장 지원 클러스터 구성(안) >

①기술 고도화	②기술 검증	③수요 확대	④사업 고도화	⑤해외 진출
· R&D기술공유이전 · 우수인력 연계 · 데이터 활용	· 제품성능평가 · 산학연 공동검증	· 사업화 실증 · 신규 수요창출 · 수요처 연계	· 상생협력기반 제공 · 투자유치기반 제공	· 해외진출 역량 강화 · 개도국 초청 · 비즈니스 연계

①정보보호 기술이전, 데이터셋 공유, AI 데이터학습센터, ②K-NBTC, K-ICTC 및 제품성능평가, K-CMP 보안 인증 등 ③수요기반 실증센터 ④Secu-Tech 얼라이언스 등 ⑤해외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 정보보호기업 단계별 성장 생태계 확립(23~)

<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 조성 계획(안)>

○ 정보보호 클러스터(판교)를 통해 융합보안 등의 신규 분야 및 초기창업 기업발굴, 정보보호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우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한 기업이 고성장 할 수 있는 거점(송파)을 신설,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단계별 성장 생태계 조성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송파) 정보보호 산업 고성장 지원 클러스터
대상	· 정보보호 스타트업	· 고성장 정보보호 중소기업
목적	· 보안 新기술 발굴, 초기기업 육성	· 보안 新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회확대
주요 프로그램	· 스타트업 지원(창업), 인재양성(교육) · 사업화 모델 컨설팅, 네트워킹 등	·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시험·인증·테스트 · 해외시장 진출 및 정착을 위한 지원

## ◇ 보안 리딩기업 주도 상생 생태계 구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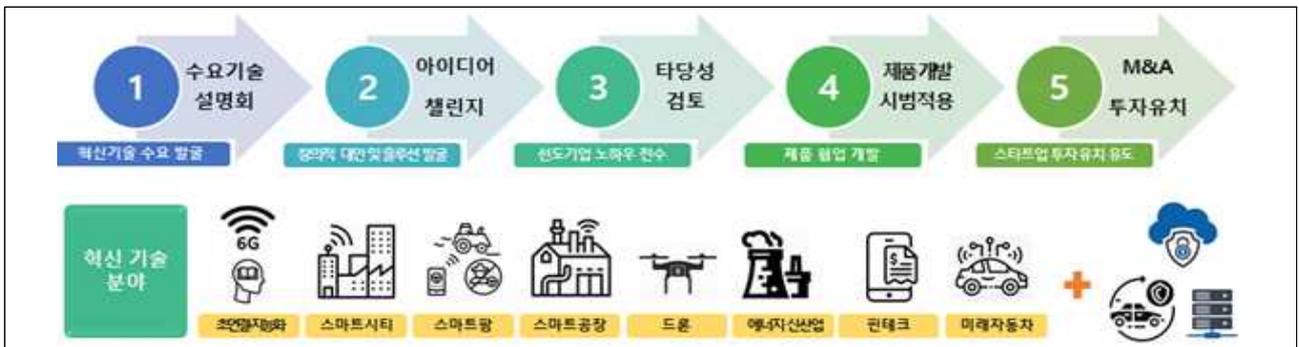
- (성장 기반 마련) 보안 리딩기업이 참여·투자하는 정보보호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을 통한 보안 시장 상생 생태계 구축('22~)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230여개) 중, 보안은 안랩 1개社('19년)
  - ※ (美)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엑셀러레이터 FedTech('15년), SixThirty Cyber('16년), Sparklabs Cyber+Blockchain('18년)를 통해 보안기업 육성
- 스타트업 양성·투자 수요가 있는 **보안 리딩기업**과 보안 전문성이 부족한 **엑셀러레이터** 대상으로 정보보호 엑셀러레이터 양성
  - ※ AI,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분야 신서비스 모델에 부합하는 전문 엑셀러레이터 양성 프로그램인 'K-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23년)에 보안부문 신설

### < 정보보호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방안 >

대상	설립지원	인프라지원	육성·성장지원	활동지원
정보보호 리딩기업	정보보호기업+ 엑셀러레이팅 역량강화	인큐베이팅 시설 입주를 통한 지원 정보보호 전문인력 직접 인건비 지원	엑셀러레이팅 역량강화 정보보호 교육 산업 트렌드 파악 정보보호분야 네트워킹, 기업탐방	(보안기업 투자 시) 투자금액 매칭지원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 정보보호전문가			

- (협업 기반 마련) 정보보호 리딩기업과 유망 정보보호 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한 **Secu-Tech 얼라이언스\*** 구성·운영('22~)
  - \* 정부·산하기관, ICT·정보보호 리딩기업, 스타트업, 창업투자사 등 50여개로 구성하여 민간 주도의 M&A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역할
-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및 수요와 협업기회 발굴을 위한 정기 네트워킹 활성화, 기술설명 데모데이 및 투자 상담회 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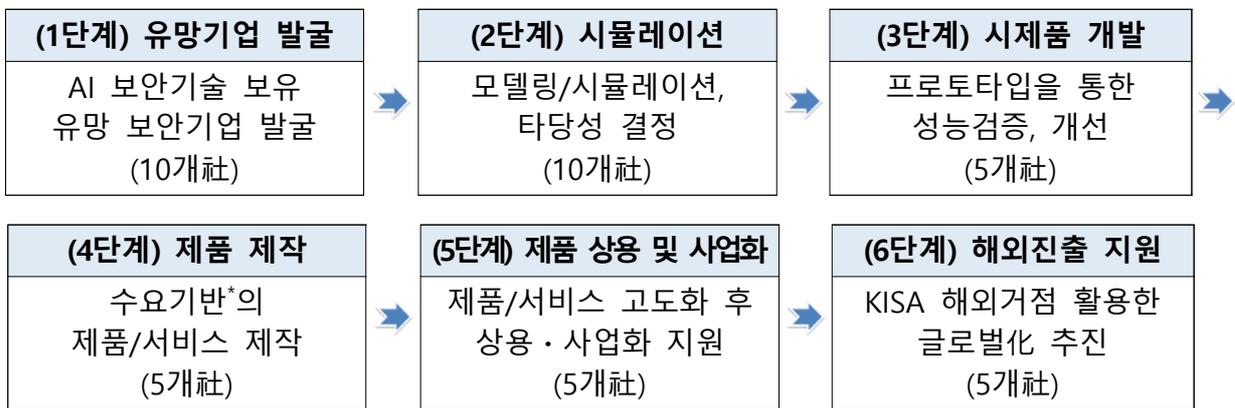
### <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운영(안) >



## ◇ AI 기반 등 혁신 보안 기업 고성장 지원 체계 강화

- (AI 보안기업 육성) AI 보안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AI 보안 기술을 가진 유망 기업을 선정·육성
  - ※ 유망기업 발굴부터 해외진출까지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5년간 20개사)
- 창업·육성 지원 플랫폼인 정보보호 클러스터(판교)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혁신보안 기술 유망 보안기업 단계별 집중 지원

### < 단계별 지원체계 >



※ 국내 공공 및 민간기업 등 연계를 통한 수요처 발굴 및 매칭 프로젝트 추진

- (고성장 지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성장 보안기업 확산 중심의 맞춤형 3SS(3-Stage-ScaleUp) 성장 프로그램 도입('21~)
  - ※ 고성장 기업 매출상승→고급인력 유입→제품 경쟁력 제고→성장의 선순환 지속
- ①스타트업→②유망 스타트업(내수)→③고성장 중소기업(수출)으로 Scale-up 할 수 있는 성장 주기별 seamless 지원체계 강화

### < 연도별 배출기업 수(총 150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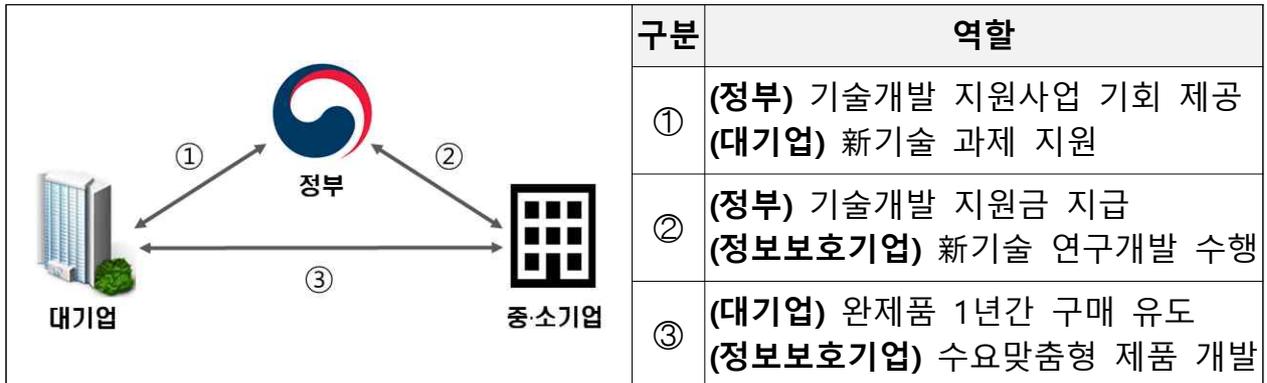


- (투자기반 확충) 중기부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하여 고성장 보안 중소기업의 후속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금 공급 촉진

\* '20년 출자사업에서 2개, 3,250억원 규모 벤처펀드 선정

## ◇ 대기업과 정보보호기업 매칭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 (수요 중심 DNA 新기술 확산) 신뢰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관련 보안 新기술 개발('23~)
  - 대기업의 新기술 수요와 중소 정보보호기업의 유연한 기술 경쟁력을 매칭하여 상생·협력 기반의 성장 환경 조성



### ◇ 매칭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 정보보호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소

- ▶ (대기업) 정보보호 新기술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해당 분야의 투자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 투자에 소극적
- ▶ (정보보호기업)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보안 신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쉽지 않고, 수요처(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신규투자가 쉽지 않은 정보보안 신기술 분야 투자환경을 활성화 하고 시장↔공급자를 매칭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23~)
  - 보안 신기술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기 힘든 중소기업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진출 기회 마련
  - 적극적인 보안 신기술 연구 및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구분	1단계('23~'24)	2단계('25~)
집중지원 분야	4개 분야	7개 분야로 확대
	AI보안, 5G보안, 클라우드보안, 데이터 보안	
	-	반도체 보안, 퀀텀통신보안, 6G보안
과제개수	8개	10개

## 해외 정보보호 신시장 발굴을 통한 기업 성장구조 완성



< 국내 정보보호산업 수출액 목표치 >

##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보안기업 수출액(1.6조원, '19년)은 대부분 물리보안제품 수출(1.5조원)이며, 정보보안은 약 1천억원 수준에 그침

< 최근 정보보호산업 수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정보보안		물리보안		합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2015	78,133	+7.1	1,545,540	+6.3	1,623,673	+6.3
2016	88,978	+13.9	1,400,102	-9.4	1,489,080	-8.3
2017	94,398	+6.1	1,475,755	+5.4	1,570,153	+5.4
2018	82,363	-12.7	1,473,769	-0.1	1,556,132	-0.9
2019 <sup>e</sup>	108,528	+31.7	1,537,785	+4.3	1,646,313	+5.8

※ 정보보호 수출은 두드러진 급성장보다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19년 기준 글로벌 정보보안시장 규모는 1,212억불이며, '23년(1,679억불)까지 연평균 8.3% 성장할 전망(Gartner)
  -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물리·정보보안 연계 및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보안시장이 급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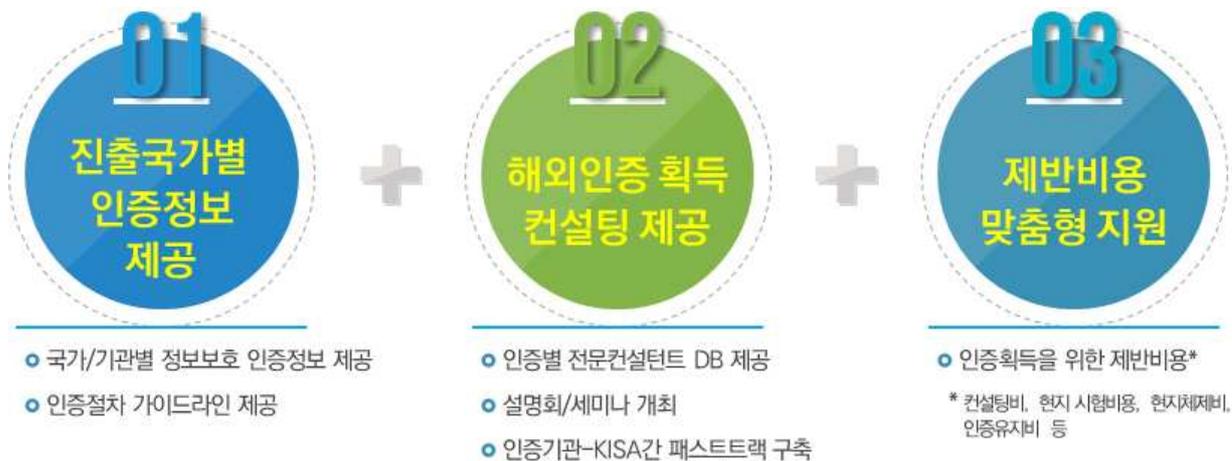
## □ 추진 전략

- 한국형 '물리보안·정보보안 연계 보안모델' 및 '비대면 서비스 + 보안 패키지 모델'을 활용하여 해외 보안시장 개척
- 정부 간 국제협력 활용 및 보안 선진시장(미국 등) 진입 지원을 통해 국내 보안기업의 해외사업 참여기회 확대

## □ 추진과제

### ◇ 정보보호 선진시장 진출지원

- (해외인증 획득지원)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해외인증 획득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21~)
  - 물리보안 및 정보보안 해외인증 획득을 위해 ▲ 국가별 인증정보 제공, ▲ 컨설팅 제공, ▲ 인증획득 제반비용 맞춤형 지원



- (글로벌 경진대회 진출) 기술 혁신 보안기업의 글로벌 경진대회 진출을 통한 국내 정보보호기업 위상제고·해외 투자유치 확대('21~)
  - 사이버보안 시장전망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보안트렌드를 반영한 집중지원 분야 선정 및 관련 기업 발굴·지원
  - ※ RSA(세계최대보안엑스포) 內 Innovation Sandbox Contest(혁신 스타트업 투자유치 경진대회) 참가 및 우승을 목표로 기업 발굴
- (조인트벤처) 해외 현지기업-국내기업 간 조인트 벤처 지원을 통한 현지화 강화 및 공공시장 진입지원 등 선진시장 진출('22~)
  - 현지 조인트벤처를 통해 ▲ 현지 운영인력 및 마케팅, 기술지원 등 현지 활동비 절감, ▲ 현지 진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 ※ (조인트벤처)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현지에서 입찰지원, 영업활동, 기술지원 역량을 보유한 현지기업과 국내기업 간 파트너십 기업

## ◇ 한국형 보안모델을 활용한 해외 보안시장 개척

- (보안 수출모델 개발) 물리보안·정보보안 연계모델을 발굴하여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등 동반 해외진출('22~)
  - 보안서비스 맞춤형 컨소시엄 구성, 물리·정보보안 해외진출협의회 구축, 정보보호해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
- ※ 세계시장 규모 : (스마트시티) '25년 1.56조\$, (스마트공장) '24년 3,912억\$, 연평균 9.22%↑(Frost&Sullivan, Smart Cities/Marketwatch, Smart Factory Market Overview, '18년)

### < 물리보안·정보보안 연계보안모델 >



- (비대면 서비스+보안 패키지사업) 언택트 서비스 모델과 보안 서비스를 결합하여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21~)
  - 한국형 '비대면 서비스+보안 패키지 모델'을 KOTRA 등 유관 기관의 언택트 수출사업과 연계하여 K-사이버 방역 확산 추진



## ◇ 정부間 협력을 활용한 해외진출 수요 발굴

-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CAMP\*) 회원국 대상 정보보호 역량강화 세미나 활동 수행('21~)
  - \* 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 : 45개국 59개 기관('19년 기준)이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대응
- 국내·현지 정보보호 전문 자문단을 활용한 수요국 대상 정책자문,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현지 보안 시장의 親한국 환경조성 지원

### < 컨설팅 수행 프로세스 >



- (국제기구 협력) WB, IDB, CABI 등 다자개발은행(MDB) 개발 협력기금 활용을 위한 보안 타당성조사·지식공유프로그램 기획('21~)
  - 유관기관(NIPA, KIND, NIA 등)의 해외 타당성조사 활동 공동수행을 통해 개도국 보안인프라 구축사업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수행
- (유관기관 공동진출) 국내 유관기관과 공동 해외진출을 통해 정보보호산업 진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21~)
  - 전자정부 협력사절단과 정보보호컨설팅 공동수행, 원조사업을 통한 개도국 정보보호 역량강화 과제수행, 유관기관과 연계 추진

전자정부 컨설팅	유상원조	무상원조	유관기관 연계사업
행정안전부(NIA)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험증진자금(EDPF)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ODA)	NIPA (타당성조사) KIND (타당성조사)

### 3. 지속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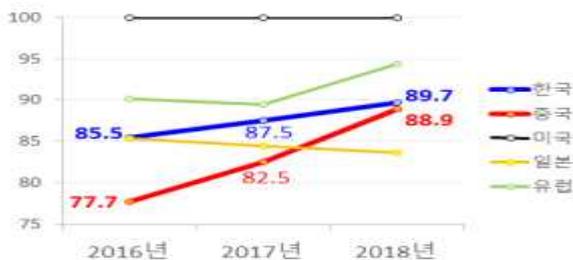
#### 3-1 차세대 보안 新기술 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길 미래 선도 보안기술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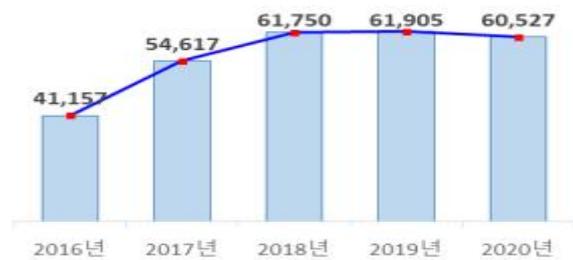


#### □ 현황 및 문제점

- 사이버공격이 대규모 테라급 공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초연결·지능화 시대 AI 등 신기술로 무장한 5세대 사이버공격으로 진화
  - 국내 정보보호 기술수준은 미국의 기술수준 대비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이나 최근 중국의 기술력이 급상승하고 있어 한국 추월 우려
    - 민간부문 정보보호 R&D 예산 규모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R&D 투자 비중\*도 해외에 비해 낮아 투자 확대 필요
- \* 한국 6.5%, 미국 16.7%, 일본 20.7% (2018, 전체 R&D 대비 정보보호 R&D 비중)



< 정보보호 기술수준(%) >



< 정보보호 R&D 예산 규모(백만원) >

#### □ 추진 전략

-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보호 R&D 투자 확대(25년 정보보호 R&D 예산규모 1,000억원)
- 차세대 정보보호 원천기술 확보 및 R&D 지원체계 고도화

## □ 추진과제

- 비대면 시대로의 디지털 환경 변화와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데이터·AI 보안新기술의 신속한 개발 필요
- 5G/6G 네트워크 환경, 양자컴퓨팅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의 대두로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전략기술 확보 필요
  - \* 테라급 DDoS 공격, AI기반 사이버 공격, 기존 암호체계 붕괴 등

### ◇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新기술 집중 투자('21~'25, 250억/년)

-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서비스 보안 강화 및 신뢰성 보장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유사 망분리 >



내·외부망 분산환경을 고려하여 망분리와 유사한 보안 수준 제공

< 비정상 행위 탐지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보안 체계 제공

< 사용자 편의성 제공 >



사용자 불편없이 지속적 보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보안 내재 환경

- (데이터 보호) 개인·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안전한 저장·관리·유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보호 新기술 개발 추진
  - AI 학습 데이터 보호를 위해 대용량의 정형·비정형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 개발 및 확산
    - \* 동형암호 :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복호화 없이 가공·활용
  -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주는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활성화
    - \* 차분프라이버시 : 데이터의 삽입·삭제, 변형에 의한 변화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정보노출 최소화

## <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 >

- ▶ **활용성 강화 암호화** : 암호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본 데이터의 정렬, 범위검색이 가능한 암호화 기술
- ▶ **위험기반 비식별화** : 데이터(개인정보) 특성과 환경에 따른 위험도를 기반으로 적용할 비식별화 수준을 자동 결정하는 기술
- ▶ **재식별 검증 및 추적** :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식별화 위험성 분석·검증, 개인·가명정보 이용내역 추적 등 대응 기술

○ **(AI 기반 지능형 보안)** 국내 AI 기술 도입 지연에 따라 기술력이 하락한 영역\*에 대해 **AI 기반 보안기술** 및 **AI 자체 보안 집중**

\* 통합보안관리, 엔드포인트 보안, 네트워크 방화벽 분야에 AI 기술 적용

- AI가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활용됨에 따라 **AI 자체에 대한 취약점 조치 및 보안 강화\*** 연구

\* AI 데이터의 조작, 학습데이터 추출 공격 등 AI 유형별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기술

## ◇ 미래 정보보호 전략기술·체계 마련

[1] 차세대 정보보호 R&D 기술 육성(~'25년, 500억 원)

○ **(양자내성암호)** 양자컴퓨팅 시대에 기존 암호 인프라 무력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도 투자 및 저변 확대

-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응용기술 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양자내성암호 성능·안전성 테스트 및 유관제품 개발 지원

\*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5G, ICT 융합 인프라에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검증 및 상용화 기반 마련

○ **(6G 보안)** 6G 보안위협 분석 및 대응기술, 6G 환경에서의 보안 내재화를 위한 기반기술 등에 대한 선행 연구 추진

※ 6G 기술의 본격적인 표준화 단계 이전에 6G 보안 기술연구를 통해 6G 보안기술, 장비 및 운영 보안 시장 선점 노력

## [2] 정보보호 R&D가 성장할 수 있는 체계 정비

- (플래그십 R&D)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특화된 R&D 추진
  - 산·학·연 협업을 통해 기술과 자원을 결집시켜 시너지 효과
  - 국내·외 시장규모에 비해 기술수준이 정체된 분야를 신기술과 접목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산업표준을 준수하여 해외 시장 선도
- (혁신적 R&D 지원) 창의적인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 연구자 선별 및 집중지원을 위한 혁신적 R&D 지원

- ▶ 정부는 문제만 제시하고 대회를 통해 우수 연구자 선발 및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챌린지형 R&D 지원**
- ▶ 복수의 연구기관 선정 후 단계별로 연구결과 경쟁을 통해 우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비 집중 지원하는 **경쟁형 R&D 지원**
- ▶ 파급력 높은 고난이도 신기술, 국가·사회 측면 미래 위협에 선제 대비할 수 있는 분야로 **역할 중심 전문연구실 확대**

### ◇ 사회문제 해결 및 안보강화를 위한 R&D 지속 투자('21~'25, 300억/년)

- (부처협력) 정보보호 관련 R&D 수요는 있으나 독자적인 R&D가 부재하여 기술개발이 불가능한 부처들의 기술 수요 반영 확대
  - 「관계기관 R&D 협의체」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자체 보안 수준 향상 등 기술 수요 기반 R&D 추진 및 결과물의 현장 적용 지원
- (사회문제해결) 국가 치안 및 재난상황 대응, 사생활 침해 해결 등 대국민 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확대
  - \* 언택트 환경에서의 딥페이크 사기 방지, N번방 등 유해콘텐츠 추적/감시, 클라우드 기반의 신개념 서비스 등장에 따른 안전한 보안환경 구축 등
- (안보강화) 시장 규모가 적고 국내 기술 수준도 낮으나,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성 검증 등 안보 관점의 핵심기술 지속 투자
  - ※ 취약점분석/보안 테스트를 해외에 의존(해외기관 시험 의뢰 등)할 경우, 소스코드 등 국내 기술·데이터 유출 우려

## 참고2 국내외 정보보호 기술수준

- (기술) 국내 정보보호 기술수준\*은 '16년 대비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 ('16년 85.5% [기술격차 : 1.1년] → '18년 89.7% [기술격차 0.8년] 4.2% ↑)  
 \* IITP ICT 기술수준조사, 5개국(미국, EU, 한국, 일본, 중국) 상대수준(미국 100%) 비교 결과  
 - 최근 중국의 기술력이 급상승(한국 2.7배)하여 한국 추월 예상 ('16년 77.7%→'18년 88.9%, 11.2% ↑)

구분	유럽			일본			한국			중국		
	2016	2018	증가률									
정보보호	90.2%	94.4%	4.2%	85.4%	90.4%	5.0%	85.5%	89.7%	4.2%	77.7%	88.9%	11.2%
정보보안	88.9%	91.9%	3.0%	83.8%	86.4%	2.6%	82.7%	87.5%	4.8%	77.0%	85.8%	8.9%
물리보안	91.6%	96.9%	5.3%	87.1%	94.4%	7.3%	88.2%	91.8%	3.6%	78.5%	92%	13.5%

- (R&D) 최근 5년간 민간부문 정보보호 R&D 정부 투자는 '16년 411억원 → '20년 605억원 규모로 연평균 10% 증가  
 (투자비중 : 정보보안 75%, 물리보안 12%, 융합보안 13%)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R&D 투자 (단위: 백만원)	41,157	53,917	61,750	61,905	60,527	279,256 (연평균 10% 증가)

※ 정보보호 R&D 정부 투자금액으로 민간 기업 등의 R&D 투자금액은 제외



<출처 : 정보보호 제품 및 기술 수준 진단맵, 2019, 과기정통부>

### 국가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 및 정보보호산업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개별적인 정보보호  
인증 및 법제



정보보호  
인증 및 법제 정비



체계적인 정보보호  
국가인증 및 법제운영

#### □ 현황 및 문제점

- 정보보호기업들은 인증제도의 중복과 인증 획득을 위한 시간·비용 부담으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국 대표 정보보호 브랜드 부재로 해외인지도 부족
-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서비스 전반에서 신기술 활용과 정보보호 데이터 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전자서명법 전면개정으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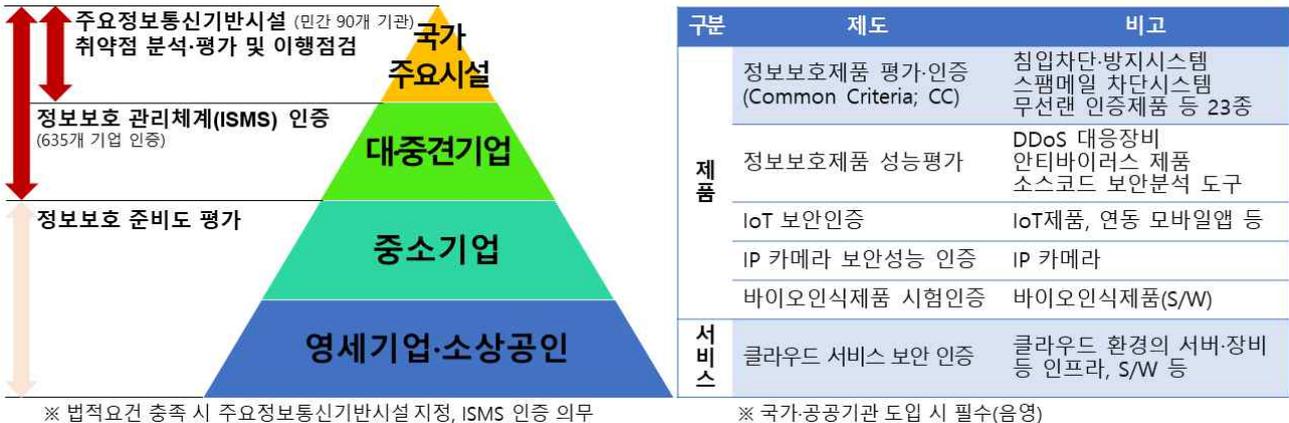
#### □ 추진 전략

- 기업 부담경감과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안인증 체계화
- ICT융합 환경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발굴 및 법령 정비

## □ 추진과제

### ◇ 수요자 관점에서 SMART한 보안인증 체계 마련

#### < 기업규모별, 제품·서비스별 주요 정보보호 인증제도 현황 >



- **(Standardization(표준화))** 현행 인증·평가제도와 국제기준, 비대면 보안 등 ICT 환경변화를 고려해 '정보보호 표준인증항목' 마련('21~)
  - 각 정보보호 인증제도에 대해서 표준인증항목을 토대로 제도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항목을 추가
- **(Modification(조정))** 분야별 유사한 인증은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로 묶어서 심사·인증하고, 인증 간 상호호환성 확대('21~)

#### < 정보보호 인증제도 간 상호 호환성 확대(안) >

- (1) 보안관리 관련 인증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중심으로 통합하고, 기업 규모별 맞춤형 운영
- (2)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관계기관과 정보보호 인증체계 협업을 통해 분야별 정보보호 인증제도와 ISMS 인증 간 상호인정 등 부담경감 방안 마련
- (3) ISMS 인증 획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시 평가항목 일부항목 면제

- **(Application(신청))** '정보보호 인증 통합 신청포털' 구축 및 홍보('22~)
  - 정보보호 인증 신청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고, 인증 정보 현황 및 인증 민원 처리현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 □ 추진과제

### ◇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 (D·N·A기반 법제 신설)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서비스 전반에서의 신기술 활용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근거 마련('21~)
  -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AI, 생체인식 등 신기술 보안성 검증 및 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원격 생체인식의 이용근거 마련 등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기술·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법제화
    - ※ 정보보호 데이터 수집·가공 체계 구축·운영 등 법적 근거 마련
- (전자서명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른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정보보호기업의 시장진출 지원('21~)
  - 전자서명 수단의 신뢰성 제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고시' 마련
    - ※ 생체인증·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서명인증업무 세부 평가기준('20~'21)→다양한 신기술 도입에 따라 평가·인정대상 확대(~'23)
- (정보보호산업 법제 개선) AI, IoT, SW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개별법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연계를 위한 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등 정보보호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21~)
  - 지능정보서비스 보안(지능정보화기본법), 5G+ 융합서비스 보안(정보통신망법), SW 개발보안(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라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 ICT융합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법제를 정보보호 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개편방안 마련

## 정보보호 인력체계 혁신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성장 주도



## □ 현황 및 문제점

- 전통산업의 ICT융합 확산에 따라 다양한 융합제품·서비스 및 산업분야별 보안위협에 대응할 보안 전문인력 수요 증대
  - ※ ICT융합 등 4차산업 육성 강조추세에도 현장은 인력난('19.4월, 한국경제)
- 정보보호는 전세계적으로 인력공급이 크게 부족\*한 분야로서, 성공적인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인력수급 개선 필요
  - \* 국내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매년 1.4~2천명 부족('19.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
  - '21년까지 세계적으로 350만 명에 달하는 IT 보안 인력 부족('20.4월, Cybersecurity Venture)
- 정보보호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임금, 근로여건 등 처우개선 및 경력모델 개발, 인력지원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인력 성장지원 요구

## □ 추진 전략

- 정보보호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 '25년까지 정보보호 전문인력 일자리 3만개 마련
- 사람 중심의 초 주기적 정보보호인력 지원체계 구축

## ◇ 정보보호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신규인력) 산업계 수요 기반의 맞춤형 정보보호 신규 인력 양성(21~)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산업 맞춤형 실무인력 및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 5G·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신산업 및 비대면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융합보안 대학원 확대

※ 특성화대학('20년 4개 → '25년 8개), 융합보안대학원('20년 8개 → '25년 12개)
- (재직자) 실무역량 및 신기술 분야 보안 역량 강화 지원(21~)
  - 재직자 대상 보안기술 습득·강화를 위한 실습과정 및 위협사례 기반의 사이버훈련장 운영 등 보안인력의 실무역량 제고
  -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ICT융합보안 산업 분야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재직 인력의 신기술 분야 보안 역량 강화 지원
- (기반 강화)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기반 강화(22~)
  - (저변확장) 중·고등학생 대상 초급 정보보호 교육,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및 국제해킹방어대회 개최 등 정보보호 인재 활동 확장
  - (교육연계) SW·AI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학점교류 등)하여 다양한 영역에 정보보호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교육 확대
  - \* 융합보안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면, SW·AI분야 대학원에서도 그 학점을 인정
  - (협력체계 구축) 유관부처 간 정보보호 인력양성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및 정보보호 교육기관, 인력 수요기업·기관 등과 협력 강화

### < 정보보호인력양성 기반 강화 >



## ◇ **주거적 정보보호 일자리 관리체계 구축**

- (생애주기 경력 관리) 정보보호 신입→경력→전문가 성장을 위한 **주거적 경력관리 및 지역별 인력유입·순환을 위한 일자리 공유**(22~)
  - 주요 직무별 경력경로, 커리큘럼 안내 등 **경력관리\*** 및 지역별 구직 정보(채용규모·임금·직무·필요역량 등) 제공 가능한 **일자리 맵 구축**
  - \* 정보보호 직무별로 필요한 교육수준·교육과정 등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커리큘럼·자격기술 등을 제공하여 정보보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
- (신규 및 전환지원) 공공기관·기업의 신입 및 경력직 구직 정보 제공, 구직자가 쉽게 정보보호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22~)
  - 정보보호 관련 분야 학위·자격·경력 등을 등록한 **보안전문가와 지자체·지역기업 등 일자리 수요를 연결하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구직자가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의 현직자 멘토 매칭 및 취업지원 강화**

### < 정보보호 일자리 관리체계 '경력활용 시스템(안)' >



- (처우개선 및 위상강화) 정보보호 업계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처우개선 및 위상강화(22~)
  - **적정 임금기준\* 마련, 파견업무 등 근로환경 개선 및 분쟁조정 위원회 확대를 통한 인력별 법률자문, 고충처리 등 지원**
  - \* 정보보호 전문가에 대한 직무 표준화 및 구체적 임금정의 추진(SW노임단가)
  - 임원·고위직 대상 인식제고와 전문인력 처우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개선으로 근로자부심, 평생근무의욕 제고
- ※ 정보보호 기업 대상 직원 경력관리 지원제도(직원대상 교육비 지원, 대체임금 지원 등) 마련

# 붙임

##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21	'22	'23	'24	'25
<b>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b>						
<b>1-1 비대면 서비스 관련 보안시장 활성화</b>						
•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및 공공분야 선도적 도입	과기정통부, 행안부					
• 중소기업의 비대면 보안 서비스 도입 확산 지원	과기정통부, 기재부					
• 비대면 관련 솔루션&정보보호 공급기업 지원	과기정통부					
<b>1-2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b>						
• AI 기반 정보보호제품 확산을 위한 학습데이터 가공공유 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 정보보호기업의 AI 학습데이터 이용 지원	과기정통부					
<b>1-3 AI 기반 물리보안 산업 육성</b>						
• 물리보안 선도적 기술	과기정통부					
• 물리보안 산업 기반 강화	과기정통부					
• 물리보안 응용 서비스 확산	과기정통부					
<b>1-4 5G+ ICT 융합보안 산업 저변확대</b>						
• ICT 융합산업 보안 강화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융합보안 산업 신시장 창출	과기정통부					
• ICT 융합보안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					
• 안전한 ICT 융합보안 솔루션 개발·공급 지원	과기정통부					
<b>② 민간 주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b>						
<b>2-1 공공·민간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b>						
• 공공부문 정보보호 투자 확대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 행안부					
• 민간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금융위					
<b>2-2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b>						
• 정보보호 기업 고성장 지원 클러스터 조성	과기정통부					
• 보안 리딩기업 주도 상생 생태계 구축 확대	과기정통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21	'22	'23	'24	'25
• AI 기반 등 혁신 보안 기업 고성장 지원 체계 강화	과기정통부, 중기부					
• 대기업과 중소 정보보호기업 매칭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과기정통부					
<b>2-3 정보보호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강화</b>						
• 정보보호 선진시장 진출지원	과기정통부					
• 한국형 보안모델을 활용한 해외 보안시장 개척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 정부간 협력을 활용한 해외진출 수요 발굴	과기정통부, 행안부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b>③ 지속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b>						
<b>3-1 차세대 보안 新기술 확보</b>						
•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新기술 집중 투자	과기정통부					
• 미래 정보보호 전략기술 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 사회문제 해결 및 안보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R&D 지속 투자	과기정통부					
<b>3-2 정보보호산업 규제 및 법·제도 개선</b>						
• 수요자 관점에서 SMART한 보안인증 체계화 추진	과기정통부					
• 국가 정보보호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및 브랜드화	과기정통부					
• 지속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	과기정통부					
<b>3-3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b>						
• 정보보호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 쉼 주기적 정보보호인력 관리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